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 기금 요청 목적
 -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 기부방법
 -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
- 기부혜택
 -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 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 운영방법 :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 정기적인 감사 실시
 - 운영실적 정례보고
- 기타사항
 -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26년안 433억원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26년안 370억원)하며,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재정	인력	기술	교육
10인 미만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현장수요 맞춤형지원	지역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지원	중상해재해 재발방지 컨설팅 신설 및 사후지원 연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제공

산재예방지원 2조 723억원('26년(안), +4,733억원)

②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6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직무훈련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제한 강화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200명)	·산업법 적용(직종, 보호조치) 확대 ·교통사고 예방 지원(무상정비 등) ·유상운송보험가입 및 교육 강화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 ·직종별 안전보건가이드 개발 및 안전 교육 확대

정부·국회

③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28년 7만개소로 대폭 확대('25년 2.4만)한다. 지방자치단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지붕·벽목 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26년 안 143억원 신규)한다.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18만 개소)은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26년 1천명)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④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CEO)·재직자 대상 산업안전 사전교육, 직업계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2.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① 도급 계약시 적정비용,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 원청의 예방 의무 강화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한다.

②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 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③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

④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9.4.)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산업안전보건법)한다.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방안 마련 (예사: 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노동자 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①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통일적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승진시 가산점 부여)하고,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②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초·중·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을 통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

정부·국회

③ 안전 의식·문화 확산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8.29~)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26년안 111억 원 신설)이다. 또한 산재예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인 만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예: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①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 부과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現 2~5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한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②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고 조사·수사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319

정부·국회

(참고)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8.(월) 1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장관, 차관, 실·국장 및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이날 회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9.2.)에 따라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각종 요청·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으로는「현장 예방점검의 날」목표 물량이 1만 2천개소 추가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하고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파하면서, 특히, 10월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자체와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에 이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협조와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중대재해가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는「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고, 지난 7.23.부터 추진 중인「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다발 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방관서별「(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을 통해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측사·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패트를 지도·점검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89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늘(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90

정부·국회

국민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 국민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여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는 등 민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 기간: 2025. 9. 4.(목) 07:00 ~ 9. 25.(목) 23:30

○ 참여 경로: <https://naver.me/xfY3JnL>

<참여자에게는 추첨(100명)을 통해 5,000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증정, 경품 증정 예정일: 2025. 9. 30.(화)>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900242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의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특히,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짜 3.3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한다. 현장대응력, 창의력,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 제공, 승진에 반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동기를 부여한다. 공인전문인증제는 고용부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고용노동행정 전반의 품질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터의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술혁신에 맞춘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I) 혁신 등을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인다. 음성·이미지 자료의 서류화, 관련 판례·행정해석 지원 등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사건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반복·관행적 업무, 불필요한 서류 작업 등 '안 해도 되는 일'도 없앤다. 이를 토대로 현장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등에 가장 신속·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84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8/13, 충남 아산시]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8/13, 전남 순천시] 용접 작업 중 에어자켓에 불꽃이 붙어 화상
 [8/28, 강원 삼척시]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음
 [8/28, 전남 나주시] 지붕 단부로 떨어짐
 [8/29, 울산 남구] 외벽 간판 설치 중 떨어짐
 [8/30, 충남 천안시] 후진하는 롤러에 부딪혀 깔림
 [9/2, 서울 서초구] 작업발판 용도로 각목 설치 중 떨어짐
 [9/2, 경기 부천시] 측면 토사가 무너져 떨어짐
 [9/3, 서울 성동구] 갱공과 함께 떨어짐
 [9/3, 전남 신안군] 잠수작업 중 익사
 [9/4, 경북 경주시] 후진 중인 지게차에 부딪힘
 [9/4, 울산 동구] LNG 탱크 바닥 청소 중 쓰러짐
 [9/5, 강원 태백시] 나무에서 열매 수확 작업 중 떨어짐
 [9/5, 경기 부천시] 지붕 철거 작업 중 떨어짐
 [9/7, 경남 김해시] 굴러 떨어지는 바위에 깔림
 [9/8, 강원 인제군]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 중 떨어짐
 [9/8, 울산 울주군] 크레인 윈치 설치작업 중 윈치와 구조물 사이에 끼임
 [9/9, 경기 시흥시] 임시 고정된 철제계단이 탈락되어 맞음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듭니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 “소상공인 산업재해예방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9월 11일(목)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5. 9. 11.(목) 13:00~

-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

- 참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안전과 고용유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협약을 통해 ▲안전보건 기술지원 ▲안전교육 및 캠페인 공동전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나아가 안전 문화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33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공단

건설분야 체험교육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체험교육장 간 상호협력을 통한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9월 12일(금) 현대건설(주) 안전문화체험관에서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등 주요 건설사 체험교육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체험교육장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최근 발생중인 건설업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체험교육장 대표자들은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유중인 인적·물적 역량과 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 체험설비 발굴 및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은 교육장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시 컨설팅 지원, VR영상 무료 제공 및 요청 콘텐츠 등을 우선 제작·배포 등 체험교육장과의 상호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공단 김학진 교육혁신실장은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인만큼,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공단은 체험교육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체험교육 콘텐츠 품질 향상 등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34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AI 기반 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추락·끼임·질식·외국인 등 4대 고위험사업장 2천 개소 AI 활용 선별 "『RED 2000』 사업장 10월 말까지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RED 2000』을 선정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단기간 집중 관리한다. 『RED 2000』은 공단이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별한 2천개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제적 집중 지도·점검에 활용된다.

공단은 AI의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단기간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근 이슈화된 사망사고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시급히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패트를 등 공단의 예방 사업을 통해 5대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 (추락) 사망사고 다발 공정률 진행 건설현장, (끼임) 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질식) 하수/폐수 처리시설 보유 제조업, (외국인) 신규 고용 또는 증가 사업장

**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한편 공단은 다양한 산업안전 분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고위험 사업장 AI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이력, 위험 기계·기구 현황 등 고위험사업장의 데이터 특성을 AI가 학습해 개별 사업장의 정보와 비교·분석하여 위험도를 수치화(0~1)하여 예측하고 있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AI·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사업장 예측 시스템은 산재 예방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다"라면서 "산재 취약 분야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3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25년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추계 세미나 개최

2025년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이하 기산협) 추계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동향과 전문가 특강, 기업체의 우수사례 발표 등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회원사 및 기업체의 안전보건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11.7(금) 13:00 ~ 11.8(토)

□ 장소 : 테이크 호텔 서울 광명 3층 루미나스홀(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2)

□ 행사 프로그램(첨부 참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 동향 및 전문가 특강, 기업체 우수사례 발표

- 친목의 장, 안전보건 및 건강증진 관련 용품 전시 등

□ 신청 방법

- 사업장 별 세미나 참가 신청서 작성 후 2025.10.29.(수)까지 회신

- E-mail : jjeun1029.iung@sk.com / TEL : 010-9594-2575(사무국장 정지은)

□ 회 비(참가비)

- 회원: 7만원/인

- 기산협 홈페이지 가입 시 회원으로 인정

- 홈페이지 접속/가입 후 참가 신청서에 가입 여부 표기

- 비회원 : 10만원/인

등록 및 접수		
시 간	내 용	비 고
12:00 ~ 13:00 ('60)	세미나 등록 및 접수	테이크 호텔 3층

개 회		
시 간	내 용	비고
13:00 ~ 13:10 ('10)	프로그램 안내 및 개회사	조재현 회장

정책 및 기업 동향		
시 간	내 용	비고
13:10 ~ 13:40 ('30)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박종일 과장
13:40 ~ 14:10 ('30)	직업병 예방사업,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김훈 부장
14:10 ~ 14:40 ('30)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개정 동향과 기업의 대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
14:40 ~ 15:00 ('20)	참석자 소통 및 전시 부스 견학	

사례 발표 I		
시 간	내 용	비고
15:00 ~ 15:20 ('20)	개인과 시대 맞춤 비만 케어	삼성물산 오은영 프로
15:20 ~ 15:40 ('20)	SK하이닉스 화학물질 관리 체계	SK하이닉스 정종구 IL

시 간	내 용	비고
15:40 ~ 16:00 ('20)	참석자 소통 및 전시 부스 견학	

사례 발표 II		
시 간	내 용	비고
16:00 ~ 16:20 ('20)	IoT활용 밀폐공간 관리 사례	SK가스 박정형 매니저
16:20 ~ 16:40 ('20)	전지 실험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고도화 방안	LG에너지솔루션 류다인 선임

폐 회		
시 간	내 용	비고
16:40 ~ 17:00 ('20)	단체 기념 촬영 및 경품 추첨	

▶ 2일차

정책 토론		
시 간	내 용	비고
09:00 ~ 10:00 ('60)	국내 안전보건 동향과 기업 대응	기산협 임원 限참석
10:00 ~ 12:00 ('120)	기업체 별 안전보건 현안 문제 토론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isanhyup.co.kr/>

오이레터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평가

심리재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심리재해’라는 용어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가이드’에서 등장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스트레스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

심리재해라는 용어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성 평가인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의 목적은 심혈관계질환 예방?

국가기관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의 목적을 ‘심리재해’로 특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보건관리자들이 무엇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시행하는지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이하 규칙) 상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재해’보다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령 규칙에는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할 사업주로

-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 차량운전,
-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치 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4>

일상 속 자연방사선, 위험도 재평가로 드러난 새로운 진실

숨은 방사선, 10년 사이 두 배로?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방사선량이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 발표된 ‘대한민국 국민 자연 및 인공 방사선 피폭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연간 평균 총 방사선 유효선량은 2009년 3.82mSv에서 7.29mSv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이 5.24mSv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방사선량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보고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민국 국민 자연 및 인공 방사선 피폭량 조사, 2020

하지만 현재 국민에게 공개된 정부 기관의 수치는 제각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는 2009년 보고서를 인용해 자연방사선량을 3.08mSv로 표기하고 있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는 3.8mSv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보고서의 5.24mSv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사선 정보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상황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연방사선 노출은 어떤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국민이 받는 자연방사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라돈 노출량이 새롭게 강화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재평가되면서 피폭량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라돈은 원래부터 우리 생활환경에 존재해왔지만, 최근 낮은 노출량에서도 폐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9년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라돈의 선량환산계수를 약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라돈 피폭량이 기존보다 약 2.6배 높은 3.62mSv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5>